

# 하천수·하수처리수 병행 활용...영산강 수질 2급수 개선

## 광주시, '영산강 물순환 사업' 용역 최종보고회 하상여과수 방식 제외...하루 10만㎥ 규모 공급 국정과제 반영 '순환형 물관리 체계 구축' 핵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하상여과수 방식 대신 하천수와 하수처리수를 병행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에서 '영산강유역 물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결과 영산강 상류 구간에서 추진된 하상여과수 확보 방안은 취수량 부족으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취수원 구조를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업은 영산강 수질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하고, 가뭄 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영산강 구간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과 함께 비상시 식수원 확보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구상은 강바닥을 통해 자연 여과된 물을 확보하는 하상여과수 방식이었다. 하루 10만㎥ 규모의 용수를 확보해 하천 유지용수와 수질 개선에 활용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신보~덕흥보 구간 현지조사와 지하수 모델링 결과, 실제 취수 가능량은 하루 1만750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치의 약 17.5% 수준이다.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필요한 유량은 하루 8만5000㎥로 산정됐지만, 조사 결과

는 이에 크게 미달했다. 지층 구조 역시 취수에 불리한 조건으로 확인됐다. 점토와 실트 등 세립질 퇴적물이 많고 여과층 두께가 얇아 물의 흐름이 제한적이었으며, 수리전도도는 기존 추정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용역팀은 하상여과수 방식으로는 목표 수량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제시된 대안은 하천수와 하수처리수를 병행 활용하는 순환형 물공급 체계다. 하수처리수는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영산강 하천수는 가뭄 시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하루 10만㎥ 구

모의 공급 능력 확보와 함께 수질 2등급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시설과 유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순환형 물관리 체계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물 자립도 확보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극한 가뭄 상황에서도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과제에 포함됐다. 다만 하천수는 계절별 유량 변동성이 크고, 하수처리수는 재이용에 대한 인식 문제가 변수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하천

수와 하수처리수를 병행 활용해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업 규모는 약 1400억원으로 추산됐다. 광주시는 물순환촉진사업 공모 등을 통해 국비 60%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설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산강 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 반영됐다"면서 "용역 결과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재원 확보와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추가조작도 인정

###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안주 원의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비시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필인 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사별 가방을 받았을 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연합뉴스

##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개선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 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을 적용했다. 보상은 1~2개월 계약자 10% (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 (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 (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연합뉴스

## 통합특별시 자치단체 행정코드 순서 '시·구·군'

### '전남 5개 시, 광주 5개 구, 전남 17개 군' 순으로 행안부 보고 후 통합전산망 구축, 두달 시범가동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27개 기초자치단체 행정표준코드 순서가 '시·구·군'으로 확정됐다. 28일 전남광주행정통합실추진단에 따르면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 서류 발급,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광주전남 27개 자치단체 전산시스템에 부여하는 행정표준코드(행정기호)를 '시·구·군' 순으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보고한 후 통합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코드는 각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부여하는 기호이다. 전국 어디서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행정서류를 발급 받도록 하는 기초 자료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온라인 등에도 적용한다.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표준코드 '시·구·군' 순으로 확정함에 따라 전남의 5개 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다음에 광주 5개구(동·서·남·북·광산구), 전남 17개군(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순으로 표기된다. 그동안 행정코드는 공식 행사의 좌석 배지, 기관장 호명 순서 등에도 사용했지만 통합특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직후 행정코드 배열 순서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전남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구·군', 광주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구·시·군'을 주장했다. 현재 행정코드는 광주시 29, 전남도 46, 5개 자치구 359~363, 전남 5개 시 480~484, 17개 군 485~501로 등록돼 있다. 통합준비단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의 기초자료인 행정코드 배열 순서를 확정하고 전산망 통합을 서두를 계획"이라며 "5월부터 2개월간 통합전산망을 시범 가동하며 오류를 개선한 후 7월1일부터 특별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직후 행정코드 배열 순서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전남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구·군', 광주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구·시·군'을 주장했다. 현재 행정코드는 광주시 29, 전남도 46, 5개 자치구 359~363, 전남 5개 시 480~484, 17개 군 485~501로 등록돼 있다. 통합준비단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의 기초자료인 행정코드 배열 순서를 확정하고 전산망 통합을 서두를 계획"이라며 "5월부터 2개월간 통합전산망을 시범 가동하며 오류를 개선한 후 7월1일부터 특별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1면 '첫 시농업 실증'서 계속

수확물 운반이나 반복 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비인 만큼, AI 온실 실증이 시설농업에 그치지 않고 농작업 대량과 무인 작업 서비스로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LG CNS는 데이터와 운영 시스템 구축을 맡는다. AI 온실에서 발생하는 생육·환경·작업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려면 클라우드 기반 운영 체계와 데이터 관리, 보안 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농기계·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과 정보기술 기업, 지방정부, 농업인이 역할을 나눠 참여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 구

조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업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와 로봇을 활용한 생산 모델이 자리 잡으면 청년농과 신규 진입자의 시설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검증한 AI 농업 모델을 향후 수출형 농업인 모델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담겨 있다. 다만 실증사업이 실제 농가 확산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AI 온실 구축과 운영에는 초기 투자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가 현장에서 확인돼야 하고, 농가 규모별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구조도 마련돼야 한다. 농업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장비와 데이터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향후 검증 대상이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대동 등 국내 최고의 기업을 비롯해 전남지역 선도 농업인 등과 함께 전남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 농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농업인과 기업이 체감하는 농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향후 60일 이내에 실시협약을 하고 연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308명이 상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20년간 2만 3000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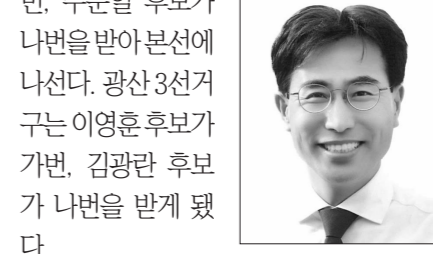
## 민주 광주시당, 광역의원 추가 경선

### 임미란·임종국·박필순 선출...청년비례 오늘부터 투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광역의원 후보 추가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남구 1선거구, 북구 2선거구, 광산 3선거구 등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된 광역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이틀간 진행됐다. 지난 1차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이들 중 추가 후보를 뽑는 이른바 '패자부활전'이다. 경선 결과 남구 1선거구에서는 임미란 후보가 선출됐다. 북구 2선거구는 임종국, 광산 3선거구는 박필순 후보가 선출됐다. 이들은 각 중대선거구 민주당 후보 중 가장 후순위 순번을 부여받아 6·3 지방선거에 나서게 된다. 이와 별도로 중대선거구 1차 경선 통과자에 대한 분선 기호 배정을 위한 순위 투표도 이뤄졌다. 소선거구 형식으로 진행된 1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공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선거구별 가·나·다 순위를 정한 것으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해졌다. 남구 1선거구에서는 노소영후보가 가·나·다 순위를 부여받았으며, 강원호 후보가 나번을 부여받았다. 북구 2선거구에서는 허석진 후보가 가



임미란 임종국



박필순

번, 주순일 후보가 나번을 받아본선에 나선다. 광산 3선거구는 이영훈 후보가 가번, 김광란 후보가 나번을 받게 됐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1차 경선을 통해 19개 선거구(단수 추천 서구 3선거구 제외)에서 후보를 확정할 바 있다. 광역의원 경선은 북구 1선거구만 남아 있는 상태로, 조만간 후보 추가 선출을 위한 2차 경선과 순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29일부터 30일까지 청년 광역비례 경선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기초의원 2차 경선(동구 가·남구 나·북구 다·광산구 가·광산구 나)은 다음달 1~2일 진행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